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절차 강화

다분히 주관적으로 운용됐던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의 기준과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대신 예비평가에서 재건축이 시급하다는 객관적 결론이 나오면 정밀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예비 및 정밀안전진단의 평가 항목과 결과가 보다 객관적으로 바뀌어 육안검사인 예비안전진단만 거치면 거의 100%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불합리한 현실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7월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맞춰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제정, 동시에 시행하기로 하고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맡긴 용역 중간 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4월 29일 경기 분당 대한주택공사에서 열었다.

그동안 재건축 안전진단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을 준용, 예비안전진단의 명확한 기준이 없고 정밀안전진단의 설비성능이나 주거환경, 경제성 평가 등에 대한 기준도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보고서는 우선 시, 군, 구가 5명 이상 전문가로 예비안전진단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되 분야별 전문가로 구조안전 2명, 설비 1명, 주거환경 1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지반, 변형, 균열, 하중, 노후 상태 및 기계, 전기, 소화설비 상태, 주차, 일조, 소음, 도시미관 상태 등을 현장조사해 '일상적 유지관리'나 '안전진단 실시', '재건축'으로 판정하도록 하고 특히 안전성이 떨어지고 매우 낡은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건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위원회 의결방식도 관례상 만장일치나 다수결 등에서 전원합의체로 하도록 못박았다.

정밀안전진단에서는 구조안전성, 건물마감 상태 및 설비성능, 주거환경성능, 경제성 등 4개 분야를 정밀평가한 뒤 항목, 부문별 가중치에 따라 종합점수를 내되 구조안전 40%, 설비성능 30%, 주거환경과 경제성 각 15%를 반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물론 구조안전 성능을 우선 평가, 심각한 문제가 있

다고 판단돼 E등급을 받으면 바로 재건축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나머지 A-D등급은 설비성능 및 주거환경평가를 거치고 경제성(재건축과 개·보수비용 비교) 평가를 따져 점수에 따라 종합판정을 내려 A-C등급은 일상적 유지관리나 개·보수를 통해 그대로 사용하고 D등급(조건부 재건축)은 시·도지사가 지역 여건 등을 감안,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공청회 결과 등을 토대로 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월중 기준을 고시,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새 기준은 자의적·주관적으로 운용됐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객관적이고 계량화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어차피 재건축해야 하는 아파트는 안전진단 기간 등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80% 동의로 리모델링 주택법 법사위 통과

오는 11월부터 공동주택 주민의 80% 동의만 얻으면 리모델링 조합 설립이 가능해져 아파트 리모델링이 활기를 띠 전망이다.

또 주택업자가 도시지역 내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경우 별도로 국토계획법상의 지구단위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4월 28일 건설교통부(www.moct.go.kr)에 따르면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과 청약통장 불법거래 처벌 강화 등을 담고 있는 주택법(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국무회의와 관보 게재 등 절차를 거쳐 공포돼 6개월 후인 11월부터 시행된다.

<매일경제 윤재오 기자>

에너지절약작품 현상공모 실시

5월10일부터 6월20일까지... 4개 부문 대상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정장섭)이 에너지절약 의

식을 고취하고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절약 작품 현상공모를 실시한다.

에관공은 범국민적인 에너지절약의식 고취와 특히, 자라나는 세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목적으로 '제25회 에너지절약작품 현상공모'를 실시키로 하고 포스터와 창작동화, 실천수기, 표어 등 4개 부문이 모집 대상이라고 4월 29일 밝혔다.

이번 공모의 내용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의 실천사례를 통해 실천방법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며 응모자격 제한은 없다.

접수기간은 5월10일부터 6월20일까지 약 40일간이며 에너지관리공단 홍보교육처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표어는 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를 통해서도 응모할 수 있다.

<가스산업신문 장성혁 기자 (shjang@enn.co.kr)>

지역에너지사업에 373억 지원 59개 사업 확정... 태양광·풍력에 집중

2003년 지역에너지사업과 지원금액이 확정됐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정장섭)은 4월 30일, 16개 광역지자체가 신청한 사업 가운데 올해 지역에너지사업으로 지원될 59개 사업, 373억원의 투자금액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중 국고보조는 258억원이다.

확정된 지역에너지사업은 태양광발전시설이 10개 사업에 약 173억원(4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풍력발전이 3개 단지에 약 105억원(28%)이 투자되는 등 대체에너지시설에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 에관공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태양광과 풍력발전에 약 8MW 용량의 발전시설이 설치돼 연간 2만MWh의 전력생산이 기대되며 판매수익도 매년 2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올해 각 지자체가 신청한 사업이 총 97개 사업에 1,518억원에 이르는 등 지자체의 지역에너지사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고 말했다.

지역에너지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산자부의 자금지원과 에너지관리공단의 기술지원을 받아 지역특성에 적합한 대체에너지 등 에너지를 발굴, 활

용하는 사업으로 지난 96년부터 소요사업비의 70% 가량을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가스산업신문 장성혁 기자 (shjang@enn.co.kr)>

대구지하철사고 관련 기술토론회 설계부터 안전관리 도입 등 제도장비 촉구

지난 2월 대구 지하철 참사와 같은 재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선 안전관리 체계 개선 등 제도적인 것 뿐 만 아니라 설계시 안전을 우선한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설비공학회 기술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안중환)가 지난 4월 26일 대구지하철사고와 관련 설비 부문에 대한 기술토론회를 개최, 안중환 조달청 사무관은 '선진국 사례를 통한 제도적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안사무관은 개선방안으로 지하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지하철·지하상가 및 터널에 이르기까지 구조적 문제점을 법규화해 법과 규정의 정비가 필요할 뿐 만 아니라 구조시스템 지휘체계 등 안전관리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사무관은 공사비 절감보다 안전우선 풍토 조성이 시급하다고 전제, 안전을 고려한 설계자에 우대제도 도입 및 시설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개선·전문가에 의한 진단시스템 도입 등 시설개선 문제를 촉구했다.

서울 역삼동 소재 한국과학기술회관(지하1층 제2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기술토론회는 사고즉시 설비와 관련된 기술적 분석과 향후 설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기술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그동안 연구한 관련자료와 현장상황을 분석한 내용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특히 이날 기술토론회에선 안중환 조달청 사무관의 '선진국 사례를 통한 제도적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비롯 '사건 개요'·'국내외 지하철 사고사례'·'대구지하철 화재사고 분석'·'지하 정거장의 공조 및 환기설계'·'제연설비 중심으로 본 대구지하철 화재'·'지하정거장 소방설비'·'지하철 소방설비 운영' 등 지하철 뿐 만 아니라 터널 및 지하공간의 방재·환기 및 공조설비 등 총 7명의 주제발표와 폭넓은 토론이 이어졌다.

<건설일보 하중숙 기자 (hajs@cmnews.co.kr)>